

사회

지구대 → 파출소 치안체제 개편 급물살

광주·전남 최대 15개 파출소 부활

도농 복합지역 등 광주 7·전남 115곳 이미 파출소 전환

경찰청이 서민 밀착형 치안체제 확립을 위해 현 지구대 체제를 파출소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최대 15개의 파출소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122곳의 파출소가 새로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나 '파출소 부활'을 근간으로 한 경찰청의 방침과 맞물려 치안체제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경찰은 지구대 분할 또는 치안센터 재정비 등을 통해 각각 5~8곳, 6~7곳의 파출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5개 산하 경찰서로부터 파출소 전환 승인 건의서를 접수받은 뒤 최종 승인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경찰청은 치안수요 조사와 도·농 복합지역 조사 등을 통해 파출소 신설 대상을 5~8곳으로 압축했다.

광주청은 다음달 초 경찰서에서 건의한 파출소 전환 후보지역 중 치안 수요가 가장 시급한 지역을 최종 선정한 뒤 경찰청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 경찰은 지난 2006년 이후 도·농 복합지역 등의 치안 특수성을 고려해 광산 6곳, 남구 1곳 등 모두 7곳의 파출소를 개소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안으로 6~7곳의 파출소를 신설한다는 계획 아래 막바지 승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또 농촌 지역이 많은 관할 지역의 특성상 밀착형 치안체제 확립을 위해 파출소 개편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전남에서 파출소 전환이 잇따른 것은 지난 2003년 8월 지구대 체제 출범 이후 농촌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치안체제 확립을 위해 파출소 개편을 적극

주진 중이다.

전남의 경우 현재 115곳의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어 파출소 개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면 단위의 지구대를 제외한 경우 향후 파출소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은 최대 20곳 안팎이기 때문이다.

전남청은 지난 2003년 출범한 지구대 체제가 농촌지역의 치안수요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06년부터 파출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114곳의 파출소가 개소됐고, 지난 7월 광양 진원파출소가 새로 문을 여는 등 지구대 개편 작업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남에서 파출소 전환이 잇따른 것은 지난 2003년 8월 지구대 체제 출범 이후 농촌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치안체제 확립을 위해 파출소 개편을 적극

주진 중이다.

지구대 체제는 강력 사건 발생시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파출소 체제에 비해 지역민들과 유대관계가 떨어지고 112신고 처리 위주의 치안이 이뤄져 농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밀착형 치안을 위해 농촌은 물론, 도시에까지

파출소 전환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경찰관들은 휴무가 다소 줄어들지만 근무인원이 증원되는 효과가 있어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도심 한복판 장례식장

주민들 집단시위·반발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의 한 아파트·주택가 밀집 지역 인근의 건물주가 장례식장 개원을 준비 중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건물주 이모(61)씨는 지난달 20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S아파트 인근 자신의 빙 건물(지상 4층 규모·연 면적 3천158㎡)에 장례식장을 만들겠다며 용도(업종)변경을 신청,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씨는 건물을 일반 음식점·사무실·유흥시설 등으로 사용했으나 경영난을 겪으면서 빙 건물로 남아 있었다. 이씨는 다음달 말 준공 목표로 지상 4층을 제외한 1·2·3층의 건물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S아파트 주민들은 "허가 취소"를 요구하

며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29일 서구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장례식장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설 경우 동네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한마디 상의 없이 인근 주민들이 깨리는 장례식장으로 업종을 변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웃의 생활 불편 등은 고려치 않고 개인(건물주)의 권리만 내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이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니 나로서도 답답 할 뿐"이라면서도 "우선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준공 일정은 갈등의 골을 끊은 뒤 원만한 합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모 일간지 관리부장 영장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형사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낸 광주 모 일간지 관리부장 박모(46)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박모(51)씨에게 "절도 혐의로 구속된 딸의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1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교통경찰 근무형태 개선 뜨거운 논란

주간 오전 8~7시·야간 오후 8~4시 출근

탄력 운영...업무 효율성 되레 저하 우려

최근 광주경찰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통 외근 경찰관 근무형태 개선제도'를 놓고 직원들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면서 초기 출근을 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이 자주 바뀌는 등 업무 효율성이 되레 저하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동부·서부·광산경찰 등 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주간근무 출근시간은 오전 7시, 야간근무는 오후 4시 등으로 변경한 제도를 도입,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전에는 주

간 근무 출근 시간이 오전 8시, 야간 근무는 오후 8시였다. 이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 일부 직원들은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주·야간 근무 출근 시간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시간 가량 빨라졌기 때문이다.

한편, 교통 외근 경찰관 근무형태 개선은 각 경찰서 관내 도로교통 특성에 맞게 교통 경찰관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인력을 집중 배치, 교통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한 경찰서 직원은 "야간 근무자들이 퇴근하게 되면 이후에는 음주단속을 할 인력이 거의 없다. 내

근 당직근무자가 남아 있긴 하지만 1~2명 정도가 전부"라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새벽에는 음주단속을 안 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시범 운영 단계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개선할 부분은 고쳐 나갈 것"이라며 "제도도입 여부는 이달 말께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 외근 경찰관 근무형태 개선은 각 경찰서 관내 도로교통 특성에 맞게 교통 경찰관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인력을 집중 배치, 교통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어르신 교통안전학교 개소

29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티운에서 노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교통안전학교' 개소식이 열렸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남성 광주지방경찰청장 등이 차량에 '어르신께서 운전중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i@

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긴 36명 검거

택시기사 3명 구속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7년 8월 광주시 북구 삼각동 앞 삼거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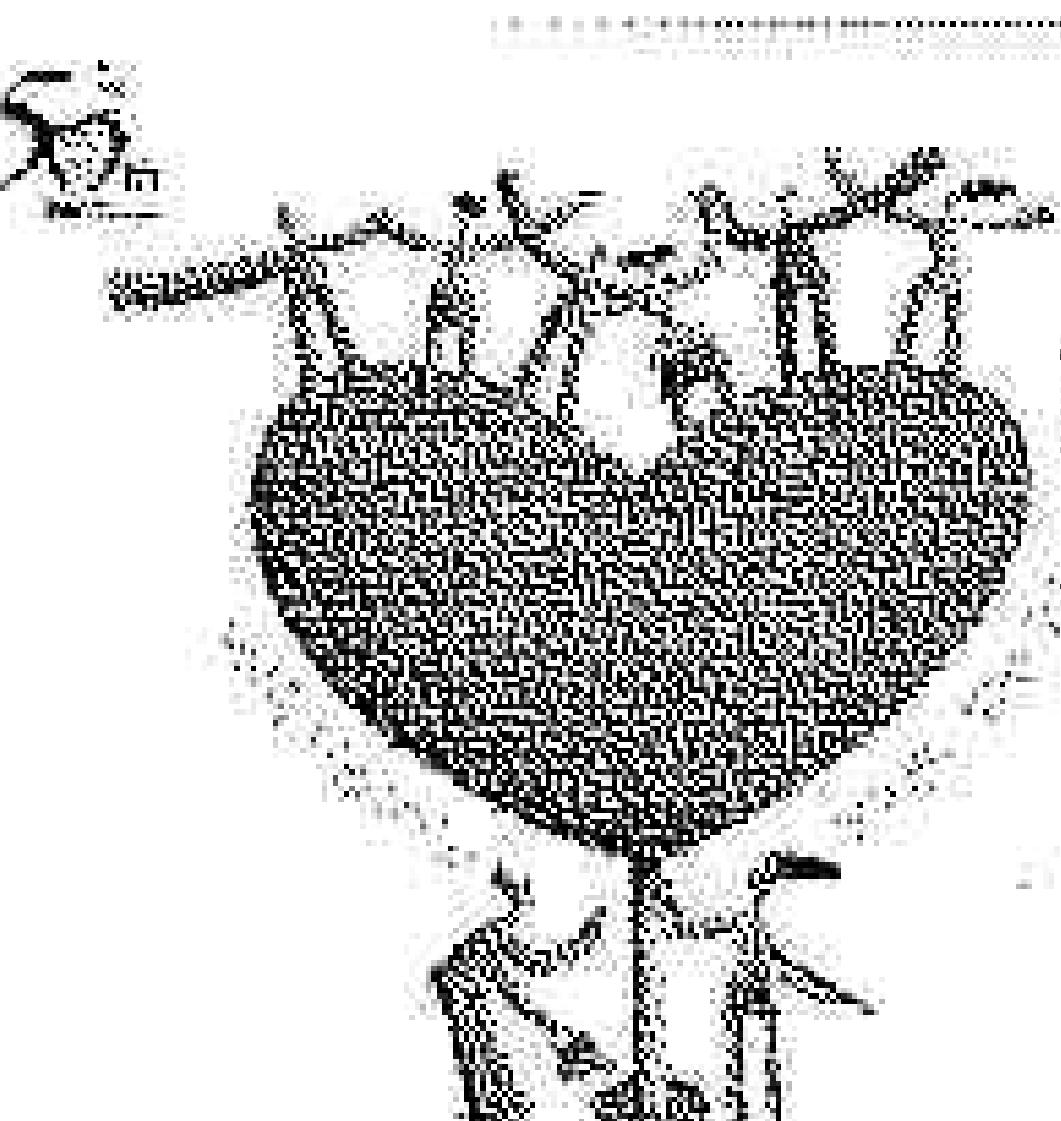
프라이드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에 각각 공범 2명, 3명을 태우고 추돌, 35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12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경찰조사 결과 조씨 등은 동료기사, 선배 등을 끌어들여 가해, 피해차량 탑승 등 역할을 나눈 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허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통원 치료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식비, 병실료 등을 받은 광주 모 병원 원무과장 진모(3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교통안전학교
터는 시민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광주 교통안전학교
터는 시민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